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2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학생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의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학습 및 휴식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4) 개성의 실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5) 양심의 자유 및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항을 정함.
-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7) 복지에 관한 권리 사항을 정함.
- 8)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사항을 정함.

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

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음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치원규칙 및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칙등”이라 한다)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칙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인권증진계획 등

제6조(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9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민족, 언어,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교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

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학교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위협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학습 및 휴식에 관한 권리

제12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등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

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휴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개성의 실현,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이 학칙등으로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의 개성 신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등으로 소지품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칙등으로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의 자유 및 의사 표현의 자유

제17조(양심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9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관련한 학칙등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의 보장 등 학생자치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②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제25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제공받을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징계 절차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원할 권리)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4장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참여단

제27조(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4.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원 또는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전문가

5. 그 밖에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단계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권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센터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교육의 시행 및 지원
2. 학생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되,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원과 상담원 등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 침해의 구제) 센터는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6조(홍보 및 통신 체계 구축) 센터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인권교육 및 연수

제37조(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학교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학생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교직원에 대한 학생인권 연수)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자 교육 등)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1.7.25.>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제목개정 2011.3.18.]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